

세계지역연구센터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정책

2020.08.27.

[목차]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중남미
6. 중동
7. 동남아 주요국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 미국

가. 재정정책

- 급여소득세 유예, 실업수당 지원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가 ‘긴급예산안’ 협상이 의회에서 7월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8.8일)
 -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결렬되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급여소득세 (payroll tax)를 유예
 - * The White House(‘20.8.8.), “Memorandum on Deferring Payroll Tax Obligations in Light of the Ongoing COVID-19 Disaster”.
 - 2020년 3월 승인되어 7월말까지 지급된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금액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
 - * 연방정부에서 300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100달러를 주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함.
 - * The White House(‘20.8.8.), “Memorandum on Authorizing the Other Needs Assistance Program for Major Disaster Declarations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 The White House('20.8.8.), "Memorandum on Continued Student Loan Payment Relief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주택 퇴거(evictions)와 주택 압류(foreclosures)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
 - * The White House('20.8.8.), "Executive Order on 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by Providing Assistance to Renters and Homeowners".
 - 다만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부여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4건의 경기부양 관련 행정명령(8.8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
- * Reuters('20.8.11.), "Trump's COVID orders too little , too late to help U.S. economy, experts say".
- Mark Zandi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4건의 행정명령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4,00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
 - JPMorgan Chase 이코노미스트인 Michael Feroli는 행정명령의 경제적 효과가 1,000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예상
 - Oxford Economics 이코노미스트인 Lydia Boussour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negligible amount)'이라고 전망
- (의회 협상 전망)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제안한 1조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2조 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8.17일).
- * Bloomberg('20.8.17.), "The Economy Is the Loser With Trump and Democrats Locked in a Bitter Feud".
- 공화당은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실업수당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였음(7.27일).
 -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지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자금 지원, 가계 현금지원(1인당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예산법안을 하원에서 통과(5.15일)시킨 바 있음.
 - 공화당은 경기부양법안의 규모 뿐 만 아니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주·지방 정부에 대한 1조 달러 지원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9월 타결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므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금의 차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힘(8.17일).

나. 금융정책

- 연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출 프로그램들의 운영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7.28일)
 - 총 9개 프로그램 가운데 9월 30일(또는 전후 시기) 종료 예정인 7개 프로그램이 연장 대상임.
 - 프라이머리딜러신용창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 * 뉴욕 연방은행이 공인한 국채 딜러인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재할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지원 능력을 개선
 - 머니마켓유동성지원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 * 적격 금융기관이 머니마켓뮤추얼펀드 시장에서 매입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연준이 동 금융기관에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을 실시
 - 프라이머리마켓기업신용창구(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 * 채권 발행시장에서 증권사 등에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함.
 - 세컨더리마켓기업신용창구(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 * 채권 유통시장에서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연준이 시중은행과 월가 딜러를 우회하여 기업을 직접 상대할 수 있음.
 -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 * 자동차, 학자금, 신용카드 등을 담보로 하는 채권(AAA등급 이상)을 연준이 보증, 매입함으로써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
 - 중소기업급여보호창구(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
 - * 지역 연준이 중소기업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PPP대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도모
 - 중소기업대출지원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
 - * 중소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 조건을 달리 정하는 등 긴급대출 실시
 - 2020년 12월 31일이 시한인 지방정부유동성기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와 2021년 3월 17일이 시한인 기업어음펀딩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다만 연준은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를 통한 경기부양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 중앙은행이 국채금리 목표(상한)를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오르면 '제한 없이' 국채를 매입하여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임.
 - 기준금리와 관련된 포워드 가이드(forward guidance)가 신뢰받고 있고 장기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에 있어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의 효과는 '미미(only modest benefits)'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어느 시점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포워드 가이드를 통해 정책금리의 목표 범위와 경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연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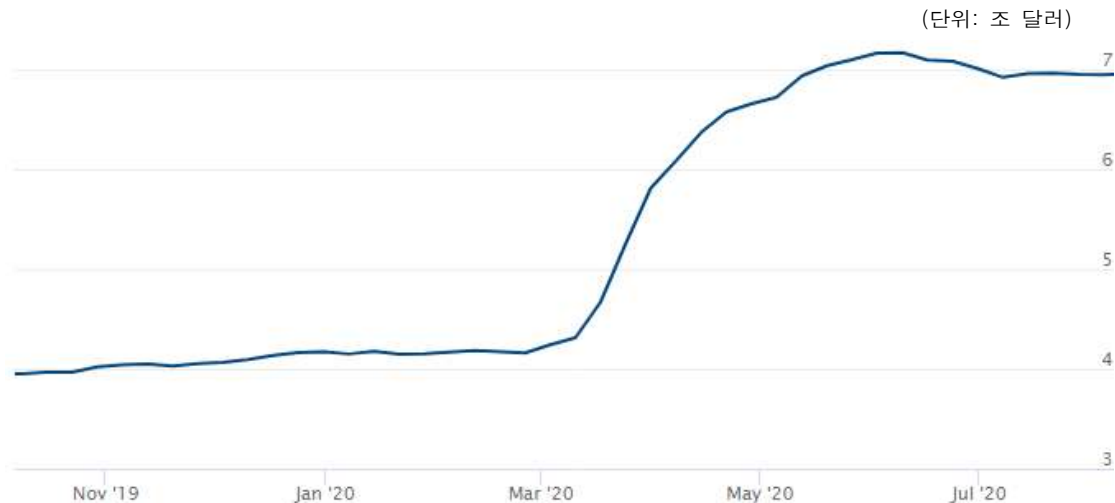
□ (전망) 10월 이후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들은 유지하되 수익률곡선관리와 같은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는 옵션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 연방 정부의 부채는 26.5조* 달러 규모인데, 이 가운데 3조 달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로 늘어남.

* FiscalData.Treasury.gov('20.8.22.), "Debt to the Penny".

-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4조 달러를 다소 상회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7조 달러 수준을 유지

그림 1.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



자료: The Federal Reserve('20.8.19.), "Recent balance sheet trends".

< 부록 > 표 1. 美, 코로나19 대응 정책

날짜	주요 내용
3.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0.5%p 인하
3.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83억 달러 규모의 '1차 긴급예산법' 서명 (코로나19 백신개발, 의료장비 지원)
3.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1.0%p 인하(0.0%~0.25%) •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5,0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2,000억 달러) 매입 추진
3.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급예산법'에 서명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지원, 코로나19 무료검사)
3.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최소 6개월)
3.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무제한 매입 • 자산담보증권(ABS)을 매입하여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의 자금조달 지원
3.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법안 하원통과 • 트럼프 대통령 2.2조 달러 규모의 '3차 긴급예산법(CARES Act)' 서명 (가계 현금지원, 긴급실업수당, 항공업계 등 지원) •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해 각각 1,200달러, 500달러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 (연소득 75,000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 100달러 당 5달러씩 감액 지원)
4.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4,840억 달러 규모의 '4차 긴급예산법' 서명 (중소기업 급여보호, 소상공인 긴급대출, 병원지원금, 코로나19 검사프로그램 등 지원)
5.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통과
6.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행정부 도로·다리, 5G 무선인프라, 지방 광대역통신망 등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검토
7.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공화당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법안' 공개
7.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 긴급대출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
8.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급여소득세(payroll tax) 유예, 실업수당 지급 연장,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연장, 주택 압류 최소화 등)

2. 유럽

가. 정부대응(방역)

□ [스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공공장소 흡연 금지 시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7월 20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¹⁾
 - 사회적 거리두기(1.5m)와 별개로, 17개 자치주 중 15개에서 모든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안달루시아, 아라곤, 아스투리아스, 발레아레스 제도, 칸타브리아, 카탈루냐, 엑스트레마두라, 갈리시아, 라 리오하, 무르시아, 나바라, 파이스 바스코, 카스티야 라 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발렌시아
 - * 위반 시 벌금 100유로
 - 나머지 2개 자치주 및 2개 자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마드리드(8월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의무화),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및 멜리아 자치시
- 8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야외 및 공공장소 내 흡연 금지, 길거리 음주 금지, 야간 유흥업소 금지 등도 시행²⁾

□ [이탈리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³⁾

- 총리령(8월 7일)을 통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실내는 의무 착용, 실외는 사회적 거리두기(1m) 불가능 시 의무 착용

□ [프랑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양한 공간(아래 참고)에서 7월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135유로⁴⁾
 - 시험장, 회의장, 세미나장, 다목적 공연장, 영화관·극장, 식당, 카페·오락시설(실내 놀이공간), 상점, 쇼핑센터, 호텔 등 가족 단위 숙박시설, 도서관, 문서보관센터,

1) EL PAIS(2020. 7. 28), <https://english.elpais.com/society/2020-07-28/madrid-to-make-face-masks-mandatory-in-all-public-spaces.html>(검색일: 2020. 8. 27).

2) AA(2020. 8. 14), <https://www.aa.com.tr/en/europe/virus-spain-to-close-nightclubs-limit-public-smoking/1942031>(검색일: 2020. 8. 27).

3) Ministero della Salute(2020. 8. 22),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FaqNuovoCoronavirus.jsp?lingua=english&id=230>(검색일: 2020. 8. 27).

4) Reuters(2020. 7. 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france/france-to-enforce-mask-wearing-in-banks-and-shops-from-july-20-idUSKCN24J0L7>(검색일: 2020. 8. 27).

박물관, 지붕이 있는 체육센터, 행정기관, 은행, 예배당, 야외 시설물, 천막, 간이건물, 수상건물, 산에 있는 대피소,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선, 공항 등

- 파리는 8월 10일부터 파리는 11세 이상 보행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⁵⁾
 - 단, 차량운전자, 자전거·킥보드 탑승자, 건강상 마스크 착용 불가능자(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외
- 또한 9월 1일부터는 직장 내 공유 공간 및 폐쇄 공간 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⁶⁾

□ [영국] 잉글랜드 지역 내 마스크 착용 7월 24일부터 의무화⁷⁾

- 적용 대상 공간: 대중교통, 상점, 공공기관, 의료기관, 유흥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 학교의 경우 시설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는 학교장 재량⁸⁾
- 위반 시 벌금 최대 100파운드

□ [독일] 5월 25일부터 공공장소 사회적 거리(1.5m)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⁹⁾

-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규정은 주(州)마다 다름.

5) France24(2020. 8. 8), <https://www.france24.com/en/20200808-paris-makes-masks-compulsory-outdoors-in-busy-areas-from-monday>(검색일: 2020. 8. 27).

6) AA(2020. 8. 18), <https://www.aa.com.tr/en/europe/france-makes-face-masks-mandatory-at-work-from-sept-1/1945837>(검색일: 2020. 8. 27).

7) 영국 정부 누리집,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ce-coverings-when-to-wear-one-and-how-to-make-your-own/face-coverings-when-to-wear-one-and-how-to-make-your-own#:~:text=children%20under%20the%20age%20of,illness%20or%20impairment%2C%20or%20disability>(검색일: 2020. 8. 27).

8) BBC(2020. 8. 27), <https://www.bbc.com/news/education-53907035>(검색일: 2020. 8. 27).

9)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Building and Community 누리집,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EN/topics/civil-protection/coronavirus/coronavirus-faqs.html>(검색일: 2020.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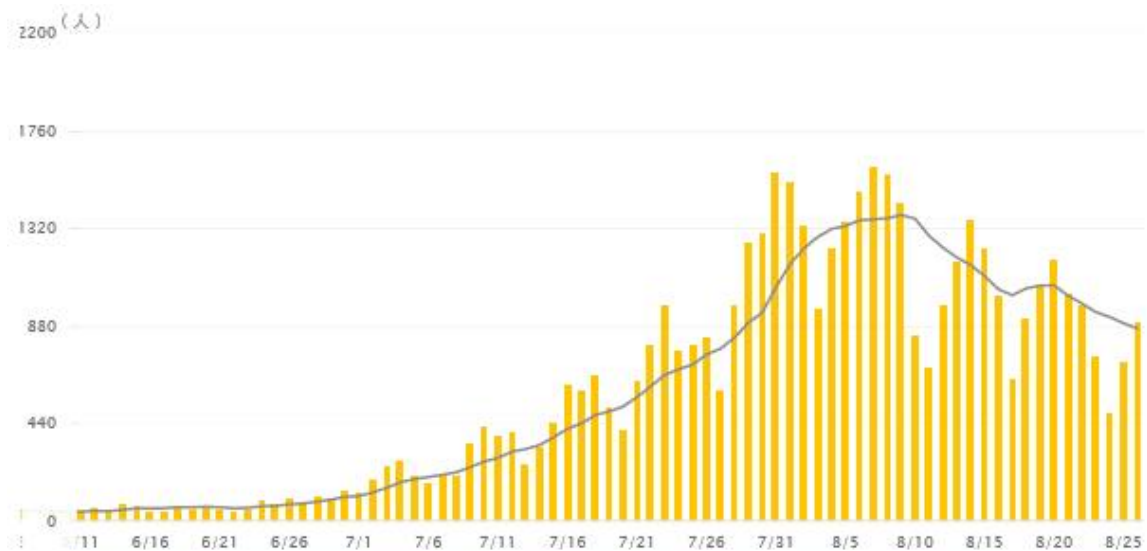
3. 일본

1) 최근 확산 추이

- 일본에서는 1월 15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8월 26일까지 총 65,616명의 감염자와 1,243명의 사망자가 발생(8월 26일 23:59 기준)
 - 일본 국내 감염자는 64,904명(사망 1,230명)이며, 이는 우한발 전세기에서 발생한 감염자(14명)를 포함. 그 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승무원 중 감염자(712명, 사망 13명) 수는 동일
 - 지역별 감염자수는 도쿄도(19,846명), 오사카부(8,139명), 가나가와현(4,600명), 아이치현(4,332명), 후쿠오카현(4,282명) 순으로 확진자가 증가세(누계)
- 최근 1주일 기준 전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약 866명 수준
 - 주로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 등 수도권 대도시 내 신규 확진자 비중이 높음.

<그림 1>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추이

(단위 : 명)



주: 2020년 8월 26일 기준

자료: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utm_int=detail_contents_news-link_001 (검색일: 2020. 8. 27).

2) 주요 정책

가. 방역

- [입국 및 여행금지]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의(水際対策) 대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등 13개 국가를 여행중단권고 대상국가에 추가¹⁰⁾
 - 일본 정부는 ‘여행중지권고’ 대상국가에 에티오피아, 튀니지, 부탄 등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13개 국가를 추가
 - 또한 일본 정부는 향후 이들 13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할 예정
 - 현재 일본 정부의 여행금지권고 대상국가는 146개임.
- [마스크 확보] 일본 정부는 향후 일본 내 감염자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도모할 계획¹¹⁾
 -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감염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마스크 생산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발언
 - 8월 현재 마스크 생산 중 일본 국내 생산 비율은 50% 수준
- [집단감염 대책 조례] 돗토리현(鳥取県)에서 8월 25일 즉시 점포 및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가 가결¹²⁾
 - 돗토리현 임시의회에서 8월 25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점포 및 시설에 영업, 사용정지를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킴.

나. 재정정책

- [추가 대응] 기존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고용 및 자금공급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2020. 6. 12 성립)¹³⁾
 -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자금공급 강화,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임대료 급부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책정한 기존 예산(2020년도 기본예산, 1차 추경)의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형태(총액 31조 9,114억 엔)

10) NHK NEWS WEB(2020. 8. 26), 「政府 13か国を追加で「渡航中止勧告」に 入国拒否の対象にも」.

11) NHK NEWS WEB(2020. 8. 26), 「マスク供給「国内生産5割に 輸入先多様化し確保へ」菅官房長官」.

12) NHK NEWS WEB(2020. 8. 25), 「鳥取県で全国初 新型コロナ クラスター対策条例 成立」.

13) 財務省, 「令和2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2号) フレーム」, 홈페이지: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sy020407/hosei020527.pdf (접속일: 2020. 8. 24).

- (고용조정조성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해 긴급대응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고용조정조성금의 상한액 인상 등 특례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2020. 8. 20 시점)¹⁴⁾
 - * 긴급사태선언 발효 기간이 연장(2020. 5. 25 전면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8월 21일 기준 신청건수는 884,843건(누계임).¹⁵⁾
- (임대료 급부금) : 5월 긴급사태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부금을 지급*
 - * 대상 : 자본금 10억 엔 미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중, 5~12월 매출액 관련하여, 1개월간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하거나, 연속되는 3개월 합계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600만 엔(개인사업자의 경우 300만 엔)을 일괄지급
- (가계·기업지원) : 자금공급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세대에 대한 추가적 급부, 지속화급부금 강화 등 긴급경제대책 내 지원 방안들을 강화

□ [학생 지원] 일본 정부는 수업료 감면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중

- (수업료 지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져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① 고등교육수학 지원제도(高等教育修学支援新制度, 4월부터 실시), ② 대여형 장학금 제도 등을 추진중¹⁶⁾
 - (고등교육수학 지원제도) 부모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학생의 수업료·입학금을 감면(또는 면제)해 주고,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
 - * 급부형 장학금 : 원칙적으로 연간 2회 지급하나,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는 등 가정형편이 악화된 학생들의 경우 즉시 지급
 - (대여형 장학금) 가계 수입이 감소한 대학·대학원생, 전문학교 등의 학생에게 최대 월 64,000엔의 장학금*을 무이자·무담보로 대여
 - * 집에서 통학하지 않는 사립대생 기준(국립대의 경우 최대 51,000엔)
- (급부금 지급) 문부과학성은 5월 가정에서 독립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지원긴급급부금’ 제도를 도입, 추진중¹⁷⁾
 - 급부금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20만엔, 그 외 학생의 경우는 10만엔을 지급(약 43만 명 대상)

14) NHK NEWS WEB(2020. 8. 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 雇用調整助成金めぐり 参院厚生労働委で質疑」.

15) 厚生労働省, 「雇用調整助成金」,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html (검색일: 2020. 8. 24)

16) 文部科学省(2020. 3. 2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係る影響を受けて家計が急変した学生等への支援等について(周知)」.

17) 文部科学省(2020. 5), 「「学びの継続」のための『学生支援緊急給付金』 ~ 学びの継続給付金 ~」,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mext_00686.html (검색일: 2020. 8. 26)

<표 1>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일시	내용
2019년 12월 5일	- 재정지출 13.2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책정 * 주요 내용은 ① 재해복구 및 부흥, ② 경기하강 리스크 최소화, ③ 미래 투자 및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 활력 유지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
1월 30일	- 내각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2월 13일	- 정부 긴급대책 (제1탄) 발표(153억 엔 규모) * 긴급대책은 ① 귀국자에 대한 지원(30억 엔) ② 국내 감염 대책 강화(65억 엔) ③ 미즈기와 대책 강화(34억 엔) ④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6억 엔) ⑤ 국제 협력 강화 등(18억 엔)으로 구성
3월 10일	- 정부 긴급대책(제2탄) 발표(약 2조 엔 규모) * ①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제공체제의 정비(486억 엔) ② 학교의 임시휴업 및 이에 따른 대응(2,463억 엔) ③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 대응 (1,192억 엔) ④ 사태 변화에 대응한 긴급조치(168억 엔) ⑤ 금융조치(1.6조 엔) -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결정(13일에 가결) (총리가 지자체에 외출자제, 휴교 등의 요청/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
3월 16일	- 일본은행이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완화 조치를 발표 * ETF·REIT 매입 확대, 금융기관에 최장 1년간 금리 0%로 대출하는 조치 신설, CP 및 회사채 매입 규모 확대 등 - 일본은행,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의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내리고 당초 1주일 단위였던 공급 기간 외 3개월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합의(미국시간 15일에 발표)
4월 7일	-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본적 대처방침'을 개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총액 108조 엔 규모)'를 발표 * ①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2.5조엔),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80조엔),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의 회복(8.5조엔),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15.7조엔), ⑤ 향후 예비비(1.5조엔) 등
4월 9일	- 총무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는 현금급부책인 「생활지원특별수당」의 지급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단순화하여 발표
4월 16일	- 정부는 기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5월 6일까지) - 기존 7개 지역 및 홋카이도, 아바라키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등 13개 도도부현을 '특정경계도시'로 지칭, 중점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
4월 20일	- 1인당 10만 엔의 현금지급을 각의결정 * 4월 7일에 의결한 긴급경제대책 중 가계 현금급부안을 수정한 후 다시 각의결정. 이에 대응하여 추가경정예산안도 확대 수정함.
4월 26일	- 후생노동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조정조성금 확충을 결정 * 휴업수당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해당 초과금을 전액 보조(단, 중소기업에게만 해당)
4월 27일	- 사업규모 118조 엔의 긴급경제대책 관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일본은행이 ① 국채의 무제한적 매입, ② 회사채·CP 매입한도 확대, ③ 0% 금리 대출 대상기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양적완화정책을 도입

일시	내용
4월 30일	- 긴급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성립 * 추경 예산에 포함된 추가세출은 25조 6,914억엔으로, 적자국채 23조 3,624억엔, 건설국채 2조 3,290억엔으로 총당함.
5월 4일	-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
5월 14일	- 39개 현에서 긴급사태선언 해제(홋카이도,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 교토, 효고 제외한 나머지 현)
5월 21일	- 3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5월 25일	-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6월 13일	-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이 성립 * 추가 세출은 31조 9,114억엔으로 추경예산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재원은 적자국채 22조 6,124억 엔, 건설국채 9조 2,990억 엔으로 총당
6월 16일	- 일본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고, 기업의 자금 융통 지원 규모를 110조엔으로 확대
6월 26일	-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로 급여소득이 급감한 소득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7월 22일	- 정부는 수요 환기를 위한 Go To 캠페인의 하나로, 여행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Go To Travel' 캠페인을 시작
8월 5일	- 일본정부는 유학생, 기능실습생, 기업 주재원 등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
8월 20일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연장여부 논의
8월 25일	- 돗토리현에서 코로나19 집단대책조례 제정
8월 26일	-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 13개 국가를 여행중지권고 대상국가에 추가

4. 중국

1) 현재 확산 동향

- 최근 중국에서는 일일 25~50명의 신규 감염자(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 발생
 - 신규 감염자는 대부분 해외 유입된 이들로, 상하이, 광둥, 쓰촨, 윈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 중

표 1. 중국 일일 감염 현황(8월 26일 기준, 명)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무증상 감염자 ¹⁾²⁾
신규	8	0	31	19
누적	85,004	4,634	80,046	365

주: 1)중국정부는 증상이 없으나 양성 판정 받은 이들을 '무증상 감염자(无症状感染者)'로 정의하고, 4월 1일부터 '확진자'와 구분해 수치를 발표하고 있음. 무증상 감염자는 양성 판정 후 14일 격리되며, 두 차례 핵산 검사를 통과해야 격리 해제됨(격리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확진자로 전환됨).

2)누적 무증상 감염자는 현재 격리 관찰 중인 환자 수 기준임.

자료: 중국 위건위(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2) 재확산 사례 및 정부 대응

① 6월 베이징

- [재확산] 베이징시는 6월 11일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新发地) 시장'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됨.
 - 베이징에는 6월 초순까지 약 50여 일 간 신규 확진자가 없었으나, 6월 11~17일 158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 방역조치에 따라 6월 28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7명)로 줄어듦.
- [대응] 중국 정부는 베이징시 내외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핵산검사 실시
 - △ 확진자·밀접 접촉자·무증상 감염자·발열증상 있는 자 △ 5월 30일 이후 신파디 시장을 방문했거나 시장 근무자와 밀접 접촉한 자 △ 감염자가 발생해 중·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街道·镇) 주민의 베이징시 밖으로의 이동 금지
 - 베이징시 택시 및 차량공유서비스 차량(顺风车)의 베이징시 밖으로의 이동 일시 중지, 다른 성(省)으로 이동하는 장거리 버스 운행 일시 중단, 항공기, 철도 탑승 시 체온검사 시행
 - 중·고위험 지역(街道) 내 주거단지는 외부인·외부차량 진입 금지, 저위험 지역 내 주거단지는 택배·음식배달·가사서비스·인테리어·이사·부동산중개 등 생활서비스 종사자 및 기타 외부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출입 통제

- 주거단지 내 문화체육시설, 오락시설 등 공공장소 내 모임 금지
 - 베이징 외 지역에서 온 이들은 14일 간 집중 관찰 시행(핵산검사 및 지속적인 체온 검사), 14일 간 호텔 투숙 금지
 - 6월 14~17일 신파디 시장, 관련 주거 단지, 의료시설 근무자, 공공서비스 지원, 교사 및 학생 등을 중심으로 총 35.6만 명에 핵산검사 실시
- **[대응]** 또한 중국 정부는 6월 18일 '코로나19 상시화(常态化)에 대비한 코로나19 저위험 지역¹⁸⁾ 하계 행동수칙 발표
- 인구 밀집 줄이기: △ 오락·레저 활동지역 인원 통제 △ 식당은 손님이 물리는 시간을 분산 운영
 - 에어컨 사용 관리: 공공장소에서 에어컨 사용 전 시스템 정상상태 확인, 냉각판·공기 배출구 청결 유지
 - 공공장소·건물 방역, 중점 그룹(노인·아동·임산부·장애인·밀폐 공공장소 근무자·환경미화원·기사·경비·교사·경찰·택배배달원·세관직원·이탈사)의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② 7월 신장위구르자치구

- **[재확산]** 7월 15일 신장자치구는 우루무치시 쇼핑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역 감염 다수 발생
- 7월 15~21일 일주일 간 신장자치구에서 109명의 신규 감염자 발생
 - 비슷한 시기에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해산물 가공공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 7월 24~30일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가 7일 연속 100명을 넘음.
 - 방역조치 후 7월 말부터 감염이 진정세를 보임.
- **[대응]** 우루무치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부분적 교통 통제, 주택단지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 시행
- 6,600여 명의 인력을 선발하여 검사작업 확대, 7월 21일까지 우루무치 주민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핵산검사 실시
 - 7월 16일 저녁부터 우루무치시 지하철 운행 중단, 17일에는 우루무치 공항 항공편 86% 운항 취소

18)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함. 6월 7일 중국 전 지역이 저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자 베이징 내 일부 지역을 중·고위험 지역으로 조정함.

- 우루무치시 시내버스 및 신장자치구 일부 지역의 버스, 도시 간 여객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국가급·성급 주요 간선도로는 정상 운행함.
- 7월 17일부터 각 주택단지 출입 통제, 생활용품 공동구매 및 언택트 배송,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작업 시행
- 우루무치에 들어온 외지인은 지정호텔에서 7일 간 격리 시행(숙식 무료)

3) 기타(해외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

- 중국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8일부터 중국 입국 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탑승객이 5명 이상인 항공편의 운항을 제한하기 시작함.
 -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중 △ 탑승객 5명 이상이 양성판정을 받은 항공편은 1주일 간 운항이 금지되며 △ 탑승객 10명 이상이 양성판정을 받은 항공편은 4주일 간 운항이 금지됨.
 - * 이와 반대로 3주 연속 탑승객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항공편은 주 1회 추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함(최대 주 2회까지만 운항 가능).
 - 이는 외항사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방글라데시 항공사 ‘유에스방글라(US Bangla)’는 6월 28일 광저우에 도착한 항공편(다카-광저우 운항)에서 탑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7월 6일부터 1주일 간 운항이 금지됨.
- [수입 육류 방역 강화] 중국 정부는 7월 23일 ‘육류 가공기업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하여 수입육류 핵산검사를 의무화함.¹⁹⁾
 - 미국, 브라질 등지의 육류 가공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수입육류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육류 수입업체가 수입한 육류를 가공공장에 반입하기 전에 핵산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중국은 자국 공장에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미국 타이슨(Tyson), 브라질 아그라(Agra), 영국 튜립(Tulip) 등 23개 외국 육류기업의 중국 내 수입을 잠시 중단한 상태임.
 - 7월 15일에는 충칭 물류센터 냉동창고의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어,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기도 함.
 - 또한 수입 육류 운송·보관 과정에서 운송장비 및 화물 포장지 등 용품의 소독을 강화하도록 함.

19) 国家卫健委(2020. 7. 23), 「关于印发肉类加工企业新冠肺炎疫情防控指南的通知」; 中国质量万里行 (2020. 7. 23), 「中国禁止美国进口肉吗 23家企业肉类产品暂停进口」; 人民日报(2020. 7. 15), 「重庆一物流园冷库进口冻虾部分外包装新冠检测阳性」.

- [수출품의 내수 전환] 중국 정부는 6월 22일 수출용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 발표
 - 내수 판매로 전환 시 필요한 CCC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
 -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무역기업에 지식재산권 신청 방법 안내·서비스 제공
 - 수출용과 내수용 상품의 생산라인·표준·품질이 동일(三同)한 제품의 생산 장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수출용 상품 판매 전용 코너 마련, 주요 보행자 거리에 수출용 상품 판매 촉진 활동 추진
 - 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중대 프로젝트 등에 수출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
 - 내수 판매로 전환한 기업에 각 금융기관의 지원 독려, 대외무역발전자금을 활용해 내수 판매 전환 기업에 교육, 홍보, 정보서비스 제공

5. 중남미

-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진앙은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
 - 2월 26일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월 24일 중미의 소국 벨리즈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중남미 전역(33개 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편입
 - 8월 26일 현재(PM 18:00) 확진자(683만 2,302명)와 사망자(26만 3,401명)의 세계 비중이 각각 28.6%와 32.1%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확산세를 유지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발생 초기 선제적으로 국경봉쇄,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더불어 긴급 경제(재정, 금융) 및 사회정책을 시행
 -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가이아나 등 일부 카리브해 소국들이 초동 방역에 성공적이다가 봉쇄조치 완화 직후 재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확산 추세를 지속
 - 따라서 재확산에 대응한 새로운 방역정책이나 경제 및 사회 정책보다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방역정책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대출상환 연장 등을 포함한 기존의 정책적 대응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임.

가. 방역 대책

□ 점진적 해제 혹은 봉쇄조치 연장 및 재강화

- **아르헨티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7.18) 이후 확산세에 전국 격리조치 8월말 연장(7.31)
- **브라질:** △州別 경제 재개 결정 방침에 브라질리아(7.2)를 위시로 개시, △국제 항공노선 운항 재개 명령(7.29)으로 외국인 입국 허용(여행자 건강보험 가입 증서 제출)
- **멕시코:** △3단계(신호등) 경제 재개 방침(5.13) 발효(5.18), △8월 10일 현재 16개 주 황색, 16개 주 적색 단계로 위험 수준 유지
- **페루:** △4단계 구성 경제 재개 발표(4.29), △8월 현재 감염 확산으로 업종별 재개 비중 저조
- **칠레:** △지자체별 감염률을 기준으로 5단계 기준(격리, 이행, 준비, 초기 개방, 개방 확대) 경제 재개 계획 발표(7.20), △8월 11일 기준 전국 대부분

- 분이 3단계 진입(중남부 일부 지역 4단계 진입), △수도사인 산티아고의 행정(Santiago) 및 상업(Estacion Central) 중심지역(區)에 대한 봉쇄를 8월 17일부로 해제
- **콜롬비아:** △전국 격리조치 해제(3.24~5.31) 이후 8월 한 달간 재강화(7.28),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은 2개 대도시(보고타, 메데진)에 한해 9월 1일부로 ‘뉴노멀’을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해제 발표(8.24)
 - **에콰도르:** △3색 신호등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분적 규제 완화(5.4), △6주간 재개 이후 감염 확산하자 수도 키토 야간 통행금지(8.3~6) 재개, △기존 창궐지역인 과야킬 재개는 유지
 - **파나마:** △6단계 경제 재개 방침(5.11) 발효(5.13), △6월 1일부 2단계 돌입(야간 통행금지 유지, 공공인프라사업 및 비금속 광업 재개, 집합시설 25% 이내 개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8월 17일부 전국 3~4단계 돌입(도소매 부분 개방, 미용실, 자동차 딜러, NGO 활동, 민간 건설 재개 등)
 - **볼리비아:** 전국 격리조치 완화(5.11) 이후 확산세에 수도(라파스) 봉쇄 재개(6.22)
 - **코스타리카:** △5월 1일부로 봉쇄 해제(4.27) 및 5월 16일부로 다단계 재개 조치(5.16), △8월 한 달간 전국 3단계(8.1~9 재개, 8.10~21 폐쇄, 8.22~30 재개) 재개 조치(노랑과 주황 경보색에 따라 지역별 단계 차별화), △유럽 및 캐나다(미국 제외) 항공노선 8월 1일 재개 발표(7.23)
 - **쿠바:** △기간 무지정 3단계 재개 계획 발표(6.11), △보건 프로토콜 및 지표에 따른 주별 재개 일정 결정, △8월 12일 현재 15개 주 가운데 14개 주가 2~3단계 재개 상황, △아바나주는 1단계 재개 상황에서 봉쇄 단계로 환원(8.8)
 - **도미니카공화국:** △4단계로 구성된 부분적 경제 재개 발표(5.17) 및 5월 20일 발효, △전국 3단계 재개 발효 예정(6.17)이었으나 감염 확산으로 연기(6.16), △다섯 번째 국가비상사태 선포(7.20)로 45일간 추가 봉쇄 강화
 - **과테말라:** △4단계 경제 재개 방침(7.12) 발효(7.26),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지자체 50% 이상 적색 단계 및 야간 통행금지 유지, △보건부는 8월 중 감염 확산 경고
 - **베네수엘라:** 감염 확산세 지속되자 3월 14일 발령한 ‘국가비상사태명령(State of Alarm Decree)’을 9월 13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 발표(8.9)

□ 백신 개발 및 확보 정책

- **페루:** 중국 국영제약회사(Sinopharm: China National Pharmaceutical Group)의 자회사인 China National Biotech Group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후보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허가(8.20)

- **멕시코:** △(외교부) 프랑스 제약회사 Sanofi-Pasteur가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돌입 발표(7.30), △(외교부) 미국 및 중국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 실행 계약 체결(8.11)²⁰,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중남미 전역(브라질 제외)에 공급할 AstraZeneca 백신 생산 추진(8.13)
- **브라질:** △AstraZeneca-Oxford Univ. 개발 백신 1억 회분 구매 및 생산 자금으로 19억 헤알(3억 5,300만 달러) 확보(8.6) 및 백신 생산업체인 Oswaldo Cruz Foundation(Fiocruz)로 이전 예정

나. 재정 및 금융(경제)정책

□ 아르헨티나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및 고용 축소 금지 행정명령(4.1) 60일 연장(7.28)

□ 브라질

- 연방소비세인 사회통합기여세(PIS)와 사회복지기금(Cofins)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1차 조세개혁 헌법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7.21)
- Banco Santander Brasil 등 브라질 4대 은행, 약 2,350억 헤알(439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및 기업 대출 상환기한 연장(8.5)

□ 멕시코

- 개인연금 부분 인출 러시(7.31): 멕시코 개인연금제도(Afores)는 근로자가 실업에 처할 경우 전월 급여 상당액을 3개월간 혹은 연금 총액의 11.5%를 인출 가능한데,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6월 동안 1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6월까지 약 43억 페소가 인출된 것으로 Afores 연합회(Amafore)는 파악

□ 칠레

- 대통령, 1백만 중산층 가계 지원 패키지(15억 달러) 발표(7.5): 무이자 대출, 임대료 보조, 주택담보대출 6개월 상환 유예 등
- 의회, 중산층 계획(Middle Class Plan) 법안 승인(7.30): 2019년 기준 월임금 525달러~2,000달러 혹은 팬데믹 이후 임금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총 85만 명 혜택)에 보너스(650달러) 지급
- 의회, 행정부 반대에도 민간연기금 부분 인출 강행(7.24) 및 공적연기금 부분 환급 추진(8.25)

20) 미국의 Johnson & Johnson 자회사인 Janssen Pharmaceuticals와 중국의 CanSino Biologics and Walvax가 개발 중인 백신이 후보.

□ 페루

-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유동성 공급 계약(임시 환매조건부채권 창구 FIMA Repo Facility 활용) 체결(7.17)
- 2차 긴급가계지원 계획(총액 18억 2,000만 달러) 발표(7.28): 85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각 205달러의 지원쿠폰(bono)을 8~9월 중에 지급 예정. 1차 가계지원금으로 18억 5,000만 달러를 지급 완료.

□ 콜롬비아

-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계획 발표(7.22): 고용창출 촉진, 지식경제, 국제 전자상거래 등 13개 전략으로 구성
- 의회, 개인연금 부분(10%) 인출 법안 상정(7.30):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민간연기금관리회사(AFP)는 860만 명 가입자의 연금 2,730억 페소(734억 4,800만 달러)를 관리 중
- 향후 2년간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0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투자프로그램 발표(8.4). 민관 공동투자는 디지털변혁 17개 프로젝트, 창조·문화산업 22개 프로젝트, 25개 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송전선로) 프로젝트로 구성.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를 포함하여 정부가 보유한 170여개 기업 지분(300억 달러)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속도로 신설과 교육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개발프로젝트 활용 계획 발표(8.6)

□ 코스타리카

- 사상 최고수준의 공공지출 대폭 삭감 조치(7.13): 사회프로그램 제외 전 부문 삭감(GDP 대비 1%)

□ 쿠바

- 경제 조치 발표(7.16): △7월 20일 발효, △시장 달러 유통 확대 허용, △달러 과세(환전 시) 폐지 등

□ 에콰도르

- 행정명령(7.22): △상반기 흑자 기록 1,200개 기업에 일정보다 5개월 앞서 소득세 납부 명령, △2억 8,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세입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125,000개 소기업 지원에 활용 계획

□ 엘살바도르

- 대법원,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지난 5월 경제 재개를 위한 의회 명령(legislative decree) 거부 및 5단계 정상화 계획에 위헌 결정(8.24)

다. 사회 프로그램

□ 아르헨티나

- 비상고용생산지원프로그램 확대(7.24): 민간기업 임금 지원, 관광·연예·문화·보건·스포츠 근로자 임금 보조(월 110달러) 12월 말 연장 등

6. 중동: 7월 이후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는 자국 경기가 위축되자 이동 및 출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금융 및 재정 지원 정책 함께 추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GCC 주요 산유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당 국가 정부는 관광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출입국 및 이동제한 조치 완화
 - GCC 국가 중에서도 발병률이 낮은 편인 UAE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상업활동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 코로나19로 민간 기업의 피해도 커지면서 현지 정부는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지속
-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 확진자 수가 증가한 이라크, 레바논 등은 통행금지 조치 시행

[표 1] 중동 주요 국가의 7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국가	주요 조치 및 대응
사우디아라비아	7월 14일: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대출 승인 기간 단축,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 6억 7,000억 리얄(약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 프로그램 도입 7월 21일: 핫즈(성지순례) 순례객 규모 축소 조정 7월 23일: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4개월 만에 쿠웨이트, 바레인, UAE에서 육로를 통한 자국 입국 재허용(사전 허가제 폐지) 8월 3일: 핫즈 순례객들 14일간 격리하고 전자 밴드를 통한 모니터링 이루어지도록 조치 8월 3일: 사우디 세관, GCC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종 목적지로 들어오는 트럭에 대한 예방조치 완화 8월 15일: 8월 말 시작되는 새 학기 첫 7주간 원격수업 유지 결정(대학교 및 기술학교 학생 중 직접 수업 참여가 필요한 일부 경우 제외)
UAE	7월 27일: 두바이 정부는 신문, 잡지, 종이 마케팅 자료의 유통 재개 허용(공공장소 유통은 불가, 가정 및 사무실 발송가능) 8월 3일: 샤르자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관리 당국은 에미리트 내 모든 해변 개장 허용, 아즈만 자유지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발표 8월 16일: 2020 두바이 엑스포 관련 엑스포 라이브(Expo Live)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혁신가 지원을 위한 긴급구제펀드에 370만 디르함(약 100만 달러) 배정

카타르	<p>7월 21일: 카타르 시민권자에 대한 제한적 출입국 허용</p> <p>7월 22일: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관련 저위험 국가목록 발표(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40개국 이 이미 포함됨)</p> <p>7월 26일: 폐쇄된 공간에서 10명 이내, 개방된 공간에서 30명 이내의 모임 허용</p>
쿠웨이트	<p>7월 23일: 7월 28일부터 통행금지 시간 단축, 일부 모스크 재개장 허용에 관한 내용 발표</p> <p>7월 28일: 항공당국은 8월 1일부터 UAE, 바레인, 영국 등을 포함한 총 20개국과의 항공운항 재개 결정</p>
바레인	<p>7월 14일: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amad bin Isa al-Khalifa) 국왕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대출 지원을 위해 1억 7,730만 디나르(4억 7,029만 달러)의 추경 법안 발표, 바레인의 국부펀드인 미래세대기금(Future Generations Reserve Fund)에 대한 한시적 자금 투입 중단 및 정부지출 활용을 위한 4억 5,000만 달러 인출 법안 승인</p> <p>7월 27일: 바레인 내각은 7월부터 3개월간의 가정용 수도 및 전기요금 면제 결정(다주택자는 1개의 가구에만 혜택 제공)</p> <p>8월 1일: 바레인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지난 4개월간 중단되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8월 9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민간 부문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가능)</p> <p>8월 19일: 입국시 재택 자가격리 절차 해제할 계획임을 발표</p>
이란	<p>7월 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p>
이집트	<p>7월 20일: 이집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 임금을 1% 삭감하고 해당 금액을 중앙은행에서 중소기업 및 저임금 근로자 지원에 사용하는 법안 통과(월수입 2,000파운드(125달러) 미만 노동자 제외)</p> <p>8월 15일: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 제출 의무화(샤름 알 셰이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 직항으로 도착하는 아랍 및 외국인 관광객 제외)</p> <p>8월 16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배정된 제3차 예외적 수당(8억 이집트파운드(약 5,022만 달러) 규모) 20일까지 지급</p>
이라크	<p>8월 2일: 항공 당국, 터키행 항공 운항 중단</p> <p>8월 8일: 부분적 통행금지 8월 15일까지 연장</p> <p>8월 16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통행금지 시간 조정, 모든 관광객 입국 금지</p>
레바논	<p>8월 18일: 21일부터 2주간 봉쇄 조치 및 야간 통행금지 시행 발표</p>

자료: MEED.

7. 동남아 주요국: 7월 이후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

□ [베트남] 베트남은 다낭시에서 100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다낭시를 봉쇄했으나 다른 지역의 제한 조치에는 신중한 모습임.

- 7월 말, 100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낭시 주민 1만 명 가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다낭시를 봉쇄함.²¹⁾
 - 7월 28일 0시부터 다낭시를 지나는 여객기, 기차, 차량, 선박의 운항을 15일간 금지함.
- 7월 28일부터 2명 이상 모임 제한, 가구 쇼핑 기간 제한(3일에 한번)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8월 11일에는 이를 무기한 연장함.²²⁾
- 다만 다낭발 재확산이 발생한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 대한 격리에는 신중한 모습임.²³⁾
 - 8월 19일부터 하노이시 식당, 카페, 술집 종업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들은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²⁴⁾
 -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는 마스크 ATM이 운용되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출입국 관리 강화에도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은 지속됨.²⁵⁾²⁶⁾

□ [싱가포르] 4월 5일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4월 7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Circuit Breaker)를 실시하고, 5월과 8월에 각각 4, 5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4월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6월 1일까지 시행함.
- 5월 26일 정부는 330억 싱가포르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²⁷⁾
 - 일자리 유지에 집중되면서 직원 급여를 최대 75%까지 지원해주는 일자리지원제도(Job Support Scheme)를 8월까지 연장하고 10만여 개의 일자리·연수 프로그램·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3개월 간 월 최대 800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고자 함.

2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28008100038>

22) <https://e.vnexpress.net/news/news/da-nang-extends-social-distancing-4144822.html>

23)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2>

24) <https://e.vnexpress.net/news/news/hanoi-mandates-social-distancing-at-restaurants-cafes-4147991.html>

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77933/>

26)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59418>

27)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A summary of the Fortitude Budget 2020"(2020.5.26). (검색일: 2020.5.27).

- 6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신속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웨어러블 장치를 6월 중 출시하였으며,²⁸⁾ 경제회복과 기업지원을 위해 5가지 주요 분야(코로나19 대응 신기술 개발, 시민과 기업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ICT 시스템 개발, 정부 ICT 인프라 현대화, 공공부문 내 데이터 분석과 AI 사용)의 정보통신기술에 35억 싱가포르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힘.²⁹⁾
- 정부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7월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한층 확대하고 7월 10일에는 총선을 실시함.
-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항공기를 통한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 혹은 일부 강화하는 한편, 8월 10일부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육상 국경이동을 부분 허용함.
- 8월 초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최근 확진자 수가 100명 이내로 감소함.
- 한편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3.2%를 기록하는 등 연이은 경기지표 부진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8월 18일 8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 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급여지원제도(Jobs Support Scheme) 연장과 직원고용 인센티브(Jobs Growth Incentive) 도입 등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³⁰⁾
- 급여지원제도(JS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항공업 및 관광업을 중심으로 2021년 3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임.

28) Ang Hwee Min(2020.6.8). "COVID-19 contact tracing 'absolutely essential'; wearable TraceTogether tokens to be rolled out in June". CNA.

29) CNA(2020.6.8). "COVID-19: Singapore to spend S\$3.5 bill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support businesses".

30) CNA(2020.8.17), "Extension of Jobs Support Scheme among S\$8 billion worth of measures announced by Heng Swee Keat."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7월 이후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

- 남아공,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임.
 - 남아공은 3월 말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가 완만하게 증가하자 5월부터 점진적으로 코로나 경보단계를 하향조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그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
 - 5월 18일을 기점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으며, 7월 5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한 이후 8월 초까지 이러한 확산세가 유지
 - 8월 초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세계 5위이며, 일일 확진자 수도 1,000명을 상회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부 규제 조치를 재도입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강도가 약하며, 최근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화
 - 일부 규제조치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정부로서는 강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 가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 정도로 유지되던 5월부터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여 6월 완화 폭을 확대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19가 재확산됨.
 - 6월 말 300명대에서 7월 초 1,200명 이상까지 급증하였다가 7월 중순 다시 200명대로 감소, 7월 말 1,300명대로 다시 증가 후 8월 초 1,500명대를 돌파
 - 가나는 이러한 재확산세에도 추가적 완화조치를 발표

표 1. 남아공의 최근 코로나19 주요 대응 조치

일자 ³¹⁾	대응조치	주요 내용
7월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상점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7월 12일	경제활동 제한	· 주류 판매 금지
7월 12일	경제활동 제한 완화	· 동일 지역 내 택시 영업을 허용하고, 지역 간 택시 운행은 승객이 70% 좌석의 이하로 탑승할 경우 허용 · 모든 종류의 경매 허용
7월 13일	이동 제한	· 야간 통행금지 실시(21:00-04:00)
7월 27일	교육기관 일시폐쇄	· 모든 교육기관을 한 달 간 폐쇄(고등학교 졸업 학년은 1주, 중학교 졸업 학년은 2주 폐쇄)

8월 3일	교육 재개	· 교육부에서 변경된 2020학년도 학교 일정 발표, 8월 24일부터 학교 수업 재개
8월 3일	비자 연장	· 봉쇄 기간 동안 만료되는 비자에 대해 2020년 9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8월 3일	긴급 지원금	·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 6,100만 랜드의 구제 기금 지급
8월 4일	교육 재개	· 개학 이후 교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교대(rotation) 시간표 운영 · 수업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부 차원에서 커리큘럼 조정
8월 5일	긴급 지원금	·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일부에 구제 기금 지원
8월 6일	교육 재개	· North West주는 Dial-a-Tuto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8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실시
8월 14일	긴급 지원금	· 실업 보험 기금에서 일시적 구제책으로 400억 랜드 지출
8월 18일	이동 제한 완화	· 8월 18일부터 코로나경보를 2단계로 하향조정(5단계가 가장 심각한 조치임) · 주간(interprovincial) 이동 허용 · 해외여행 금지 조치 유지 · 야간 통행금지 완화(21:00-04:00→22:00-04:00)
8월 18일	경제활동 제한 완화	· 필수적이고 적절한 위생 조치 하에서 경제활동 허용 · 식당 및 술집에서의 주류 구입 및 섭취는 허용하되 나이트클럽은 폐쇄 ·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택근무 권장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

표 2. 가나의 최근 코로나19 주요 대응 조치

일자 ³²⁾	대응조치	주요 내용
6월 28일	긴급 지원금	· 보건근로자 대상 코로나 19 인센티브 패키지(추가수당 지급 등) 3달 연장 (~9월)
7월 26일	경제활동 제한 완화	· 관광지 및 야외 주점 등 재개장
7월 26일	사회적 모임 제한 완화	· 종교시설 집회 제한 완화
8월 16일	사회적 모임 제한 완화	· 컨퍼런스, 워크샵, 시상식 등의 집회 인원 제한 조치 해지

□ 그 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7월 1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790명)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재확산 우려로 3단계 완화를 보류하고 2단계 조치를 세 차례 연장함.

31) 각 조치의 최초 실시일 기준이며, 적용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조치 발표일

32) 각 조치의 최초 실시일 기준이며, 적용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조치 발표일

- 케냐는 7월 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7월부터 종교행사에 한해 사회적 모임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7월 중순부터 국내선 운항을, 8월부터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함.
- 에티오피아는 3월에 국경을 봉쇄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는 없으며,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함.
 - 일일 확진자가 6월 말 150명대, 7월 중순 300명대 가량에서 8월 21일 1,8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 중

표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최근 코로나19 주요 대응 조치

국가	주요 내용
나이지리아	6월 29일: 통금시간 외의 시간에 한해 지역 간 이동 허용 6월 30일: 초·중·고등학교 졸업반에 한해 등교 재개 7월 27일: 봉쇄 완화 조치 2단계 1주 연장 8월 6일: 봉쇄 완화 조치 2단계 4주 연장
케냐	7월 6일: 100명 이하가 모이는 종교행사 허용 (그 외의 사회적, 정치적 모임은 계속 금지) 7월 7일: Nairobi, Mombasa 전체에 대한 봉쇄조치 해제 7월 15일: 국내선 운항 재개 8월 1일: 국제선 운항 재개
에티오피아	7월 8일: 국제선 운항 재개